

처벌이 능사?...경범죄 청소년 훈방으로 재범 막는다

도입 10년 '청소년 선도심사위' 결정 사례 봤더니

광주 5개서 110차례 개최...입건 7명·훈방 208명·즉심 217명
광산서, 건물 무단침입 10대 9명 주거침입죄 처벌 않고 훈방
서부서, 불우한 환경에 편의점서 과자 훔친 중학생 즉결심판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으나, 광주 5개 경찰서에 꾸려진 '선도심사위원회'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는 기조 아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게 훈방 처분을 내리는 등 기회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 처벌보다는 피해자 합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입건하지 않고 훈방처분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해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막는 한편 실질적 계도를 통한 재범 감소를 유도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광주일보가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이한 '선도심사위원회' 처분 결과를 조사한 결과, 광주 5개 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현재까지 모두 110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도위는 2012년 전국에서 꾸려져 시행됐으나, 2018년 이전 심사 결과는 전산화되지 않아 집계되지 않았다.
광주 5개 경찰서는 2018년 9회, 2019년 31회, 2020년 27회, 2021년 32회, 2022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선도심사를 개최했다. 이 기간 선도심사(심의)에 회부된 청소년은 모두 432명이다. 이 가운데 훈방처분 된 청소년은 208명에 이른

다. 즉결심판에 청구된 이는 217명이었고, 7명은 입건돼 정식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훈방 처분된 사례 중에서 '무단 건물 침입 청소년 사건'이 눈길을 끈다. 광산경찰은 2019년 8월 광산 구도 건물에 무단 침입한 9명의 청소년을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는 대신 선도심사 대상 사건으로 올렸다. 선도심사위는 "호기심 삼아 동네 빈 건물에 들어갔는데 죄가 되는 줄 몰랐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청소년들의 진술을 듣고 훈방 결정을 내렸다. 이들 청소년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자(건물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면 선처해달라는 점도 고려됐다.
서부경찰은 중학생이 편의점에서 과자류를 훔친 사건을 선도위에 올렸다. 편의점 업주가 CCTV를 확인하고 직접 불잡아 경찰에 넘긴 사안으로, 경찰은 해당 청소년이 부모의 이혼을 겪은 데다 가정 형편이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선도위 회부를 결정했다. 선도위는 (이 청소년이) 전과가 없고 선도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데다, 피해금을 모두 갚아 준 점 등을 고려해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즉결

심판을 청구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선도 하도록 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4월 광주 한 도로에서 상의를 벗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다 불잡힌 청소년에 대해 즉결심판이 내려졌다. 심사위는 "(심사 대상자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즉결심판과 함께 정신과 진료, 광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을 연계 처분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로 분류되는 선도심사위 처분(즉결심판)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서 경찰서장에게 부여한 즉결심판 청구권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말고 내부위원(여성청소년과장 등)과 외부위원(지자체 공무원·교육청 장학사·교사·의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4인 이상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심의 대상은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이다. 다만

처벌 조항에 벌금형이 없거나 촉법소년 사건(만 10~14세 미만), 죄안 된 처분이 명백한 사안, 집단·상습·보복·성범죄 등 죄질이 나쁜 사건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분은 크게 훈방, 즉결심판 청구, 입건 송치 등 세가지다. 훈방 처분은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죄를 뉘우치는 때에만 내려진다. 이 경우 '선도프로그램 이수'가 조건으로 따라붙는데, 미이수 시 입건·송치되는 정식 수사 절차를 밟게 된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 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이다. 범죄 경력이 남지 않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분류된다. 2012년 3월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 맞춤형 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낙인효과 제거 및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재범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거쳤어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건비 주면 횡령죄”

광주지법, 80대 여수 아파트 관리소장 등 2명 유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 중 일부를 직원 인건비 등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지출 용도뿐 아니라 지출 절차와 시기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설사 아파트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어도 별실·철거 전까지는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지난 1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모(80)씨와 임모(8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0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여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최씨와 관리사무소 소장인 임씨는 2018년 3월을 전후로 은행에 예치돼 있던 장기수선충당금 가운데 8700만원을 찾아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수당 지급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1심 법원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쳤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지역주택조합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 430세대 가운데 403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재건축 요건을 갖췄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전유부분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고, 관리 주체는 법정 위탁관계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 이는 전유부분 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며 “공동주택의 ‘별실 또는 철거’ 전까지 관리주체가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 반환하는 등 처분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공동부분 중 주요시설의 수선공사’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별도 징수·관리·집행되는 자금이므로 일반 관리비로의 전용은 불가하다”며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부득이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거쳐 예산 전용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용도를 넘어선 것으로 이른바 횡령죄를 구성하는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사용처가 대부분 본래 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도 거의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안전 협력업체 불법하도급 수사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전지지부는 18일 광주경찰청 앞에서 안전 협력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 제출과 함께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버지 무덤 파헤치자 분노...동생 흥기로 찌른 50대 징역 5년

부모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갈등을 빚던 중 상의 없이 아버지 무덤을 파묘한 동생을 흥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8시 40분께 고창군 자신의 아버지 묘소 앞에서 흥기로 여러 차례 찌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은 가까스로 A씨를 피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고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이날 동생이 상의 없이 아

버지 묘를 열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동생은 며칠 전 돌아가신 어머니를 아버지 묘에 합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동생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동생을 흥기로 살해하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담벼들이며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형호 기자 khh@

‘항만회사에 아들 취업 청탁’ 전 목포해경서장 유죄 확정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의 취업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B(6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일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h3>상무지구(상가매매)</h3>	<h3>당진(신축)원룸매매</h3>	<h3>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h3>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주 광산구(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치평동(근린상가) ▶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다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